



## 진흥회 참여없는 독립적 사장추천위 결의 20일 진흥회에 구성안 제안

사장선임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연합뉴스의 2대 공모제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사장추천위원회에 대해 뉴스통신진흥회(이하 진흥회)의 참여 없는 독립적인 구성안을 결의했다.

비대위는 19일 오후 유의주 위원장 주재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사장추천위는 7명으로 하되 진흥회 위원이나 진흥회의 추천을 받은 인사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장추천위 구성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날 결의된 비대위의 구성안에 따르면 사장추천위는 사원대표 1명을 포함, 언론노조, 경영·경제분야, 기자회견, 언론학회, 법조분야, 시민·여성단체 분야에서 각각 1명씩 추천받아 구성되며 단수 후보 추천을 원칙으로 했다.

비대위는 4시간여동안 사장추천위에 진흥회 인사 참여를 놓고 찬반 격론을

벌였고, 보도와 경영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 사장 선임에 진흥회 참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최종 결의했다.

비대위는 20일 이 구성안을 진흥회측에 전달하면서 독립적인 사장추천위 구성에 대한 비대위와 사원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이번이 진흥회가 구성된 뒤 처음 경영진을 선임한다는 의의가 있고 사장추천위를 제도화하는 첫 사례가 되는 만큼 지금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하면 향후 경영진의 임기가 끝나는 3년마다 회사 전체가 사장 선임의 독립성 시비로 진통을 겪는다는 점에서 회사의 앞날을 가르는 분수령이다.

그러나 진흥회가 자신의 참여를 주장하고 있어 사장추천위 구성안을 놓고

양측의 의견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차기 사장 선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는 사장추천위 구성에서 연합뉴스의 최대주주인 진흥회의 역할을 최소화한 것은 사장추천 과정에서 정칙권 등 '외풍'을 막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특히 비대위는 이미 신분이 노출된 진흥회 측이 사장추천위에 참여한다면 진흥회 자신의 노력에도 각종 로비와 외압에 사장추천위가 왜곡될 가능성이 커 결국 과거 '정실 인사'라는 구습을 되풀이 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연합뉴스의 '바람막이' 역할을 해야 하는 진흥회가 오히려 외부의 로비 등에 오염돼 투명하지 못했던 과거 사장 선임 절차를 공식화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장추천 과정에서 진흥회의 중립성 시비는 그 자체만으로도 연합뉴스의 재도약의 토대인 뉴스통신진흥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진흥회 스스로 존립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비대위의 확고한 입장이다.

아울러 비대위는 사장추천위에 경영·경제분야 추천인사 1인을 포함, 치열한 차세대 미디어 경쟁시장에서 연합뉴스의 위상 제고와 맞물린 사장 후보의 경영능력과 수익창출을 위한 청사진을 검증토록 했다.

유의주 비대위위원장은 "독립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한 연합뉴스 사장 선임은 분명 연합뉴스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며 이는 결국 연합뉴스의 최대주주인 진흥회의 역할과 명분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말했다.

### 사장추천 논의 숨가쁘게 진행중 사원관심이 독립적 사장선임의 핵심

새로운 경영진 선임이 불과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이달 초 유의주 노조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장선임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구성돼 본격 활동에 들어가면서 회사 안팎으로 사장추천 방식에 대한 논의가 긴박하게 이뤄지고 있다.

외압이나 로비에 휘둘리지 않는 사장 선임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엔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 사장추천안을 놓고 뉴스통신진흥회(이하 진흥회)와 비대위 사이의 조율이 필요한 시점이라 촉박한 시간에 어떤 합의가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배구조개선 및 경영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과 노조 집행부원 등 총 16명으로 이뤄진 비대위는 진흥회가 정치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사장추천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은 상태다.

11일 정기이사회에서 진흥회는 자체적으로 사장추천위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연합뉴스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인물이 사장으로 선임돼야 한다는 데 사원의 총의가 모아져 비대위에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13일 첫 회의에서 비대위는 사장추천이 사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19일 회의를 통해 진흥회 참여없는 사장추천위 구성안을 최종 결정했다.

비대위 활동이 시작되면서 노조는 14일 열린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진흥회가 사장추천위 구성에 나서려는 것보다 사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성명을 채택했다.

앞서 12일 정재용 전임노조위원장 등 5명의 전임노조위원장도 회의를 통해 현 노조집행부의 사장추천 방식에 대한 방향 설정에 지지의사를 표했다.

19일 유의주 노조위원장과 박창욱 사무국장이 진흥회 측 인사를 비공식적으로 만나 사장추천위 구성에 대한

14일 노조 대의원대회 결의를 전달했지만 양측의 입장차만을 확인하고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했다.

비대위는 결정된 최종안을 20일 진흥회 측에 전달하고 절충점을 찾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지만 진흥회가 자체적인 사장추천위 구성을 고수하면 접점을 찾기 힘들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사장 공모가 시작되는 29일까지 절충안이 마련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비대위는 다음달 말로 예정된 현 경영진의 임기 완료가 임박했지만 사원의 총의가 독립적이고 투명한 사장추천위 구성을 지지하는 만큼 진흥회와 지속적으로 접촉, 사원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되는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비대위는 사장추천을 둘러싼 이런 안팎의 상황을 전달하고 독립적인 사장 선임에 대한 결의를 밝히기 위해 사원 전체가 모이는 대토론회 등을 준비 중이다.

#### ● 사장선임절차 ●

뉴스통신진흥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합뉴스 대표이사는 뉴스통신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연합뉴스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돼 있다.

진흥회는 연합뉴스의 유상증자 일정에 따라 이달 28일 주금납입을 완료하면 29일부터 1대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진흥회는 이달 29일 중앙일간지 등에 연합뉴스 사장 지원자 모집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사장 선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내달 안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사장추천위원회는 이들 사장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 전형과 면접을 통해 사장 추천 대상자(단수·복수 여부 미정)를 선정한다.

연합뉴스는 주주총회를 열어 진흥회에서 추천한 인사를 포함해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서 진흥회 추천 인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한다.

대표이사 선임은 현 경영진의 임기인 5월26일까지 완료돼야 한다.

# 3년전 공모제 투쟁은 독립적 사장추천위 구성 모범사례 평가

제16대 노조는 2003년 1월 출범과 동시에 '사장 공모제 쟁취'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본격적인 투쟁에 들어갔다.

당시 노조는 지배구조개선특위(간사 류일형)를 결성해 4개월에 걸쳐 1인 릴레이 시위, 집단 가두시위, 1박2일 토론회, 계시관 토론, 기자회견, 관계자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투쟁을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공모제 도입이 지연되자 자체적으로 공모절차에 들어가 사장 후보 4명을 선발, 최대주주와 정부측에 통보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노조의 이런 노력에 따라 당시 최대주주였던 KBS는 결국 노조측의 의견을 수용해 연합뉴스 사상 처음으로 공모제가 도입됐다.

당시 사장추천위는 ▲사원대표 ▲KBS 대표(주주) ▲MBC 대표(주주) ▲시민사회단체 대표 ▲언론인 단체 대표 ▲언론관련 시민단체 대표 ▲언론관련 학계 대표 등 7명으로 이뤄졌다.

특히 사장추천위 구성 과정에서 정연주 KBS사장은 "사장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는 것은 여러 문제와 혼란을 일으키는 만큼 올바른 사장선임을 위해 1명만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단호히 밝혀 사장추천위는 1명만 선정해 주춤 상정했다.

당시 연합뉴스 노조의 이런 공모제 투쟁과 성과는 언론계의 사장 선임방식에 변혁의 바람을 몰고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같은 시기에 각계의 존경받는 인사로 이뤄졌던 뉴스통신진흥회 정관 설립위원들도 노조의 이런 변혁성과를 살리는 한편, 진흥회가 정치권 입김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인식, 진흥회 정관 기초안에 '뉴스통신진흥회는 사장 선임을 위해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명문화 했다.

'사장추천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사실상 공정하고 투명한 사장추천위를 별도로 구성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 타기관 공모절차

### 1. EBS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라 방송위원회에서 사장을 선임하는 EBS는 2002년 10월 사장공모제를 도입했다. 당시 사장심사위원회는 방송위원 4명, 외부인사 3명 등으로 구성됐다.

신문공고를 통해 9명이 지원, 이중 5명이 심사위원회 서류심사를 통과했으며 추후 면접을 통해 2명으로 압축됐다. 노조는 이 중 김학천씨를 선호한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방송위 전체회의에서 김씨가 제 2대 EBS 사장으로 임명됐다.

2003년 7월 제3대 EBS 사장 공모에서 후보선정위는 상임위원 4인, 외부인사 3인(EBS 사원대표 1인 포함)으로 구성, 후보자 8인중 중 2인을 선정해 방송위에 추천했으나 방송위 전체회의의 동의를 받지 못해 재추천에 들어갔다.

규정에 의거 후보선정위원 중 외부인사 3인을 새로운 인사로 대체하고 후보선정위 심사를 거친 기존 접수자는 대상에서 제외한 채 다시 선정절차를 진행 고석만 후보를 사장으로 최종 결정했다.

2005년 3월 고석만 사장이 MBC 사장으로 옮겨 가게 됨에 따라 방송위는 사장공모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후보선정위원회를 통해 이흥기, 권영만 후보 2인이 최종 후보자로 추천됐으며 당시 EBS부사장 권영만 씨를 사장으로 임명했다.

### 2. KT&G(전 담배인삼공사)

1997년 10월 '공기업경영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한 사장 공개채용 방식을 도입했다. 민영화 초기 사장추천위원회는 비상임이사 4명(사외이사, 학자, 기업인, 변호사 등), 현직사장, 민간위원 2명 등으로 구성됐다.

2002년 KT&G로 민영화한 뒤에는 회사 정관에 따라 사장을 공모하게 됐으나 공모절차는 대동소이하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들이 정한 6명과 현직 사장(연임을 위해 후보 출마시 배제) 등 7명으로 구성한다.

후보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추천하며 복수 추천도 가능하다. 2004년 주주총회를 열고 대표이사 사장에 광영균 현 사장을 선임하고 민영화 2기 체제가 출범했다.

### 3. 코스닥증권시장(현 한국증권선물거래소)

2002년 1월 사장을 공개채용했다. 이사회를 통해 추천위원을 선정해 추천위원회가 구성됐으며, 추천위원회는 응모자 서류심사, 인터뷰 등을 거쳐 사장 후보를 뽑아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 의결로 사장이 선임됐다.

2004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라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 코스닥위원회를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통합함에 따라 이사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게 됐다.

추천위는 통합거래소 사외이사 5명, 한국증권협회 추천 1명, 선물협회추천 1명, 대통령이 정하는 거래소상장법인과 코스닥등록법인 대표 각 1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다. 단 재정부 장관이 재선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2004년 10월 이사장 선임절차에 들어가 한이현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건용 전 산업은행총재 등 10여 명이 지원했으나 최종 후보로 정건용, 이인원, 강영주씨 등 재정경제부 출신인사 3명이 거론되자 노조 등이 반발하고 특정한 선정 외압 파문이 일면서 전면 백지화됐다.

같은 해 2월 다시 후보추천위가 꾸려져 최충후보 3명이 추천됐고, 이영탁씨가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 4. 국립극장

문화관광부 산하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극장은 1999년 1월 제정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극장장을 공개 모집했다.

후보자를 심사 추천하는 '국립극장 운영심의회'는

문화관광부 주도로 국립극장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 추천자로 구성됐다.

2000년 1월 운영심의회는 당시 공모된 후보자 12명 가운데 김명곤씨를 극장장후보로 추천, 중앙인사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극장장으로 선임했다.

2006년 1월 공모한 국립극장장 공모 과정에서는 신선희 선임 극장장 외에 박인배 민예총 상임이사, 임진택 전 전주세계소리축제 감독 등 3명이 최종 후보로 추천됐으나 신 극장장이 최종 낙점됐다.

### ● 뉴스통신진흥회란 ●

뉴스통신진흥회(이사장 이창우)는 2003년 4월 제정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간통신사의 지위를 부여받은 연합뉴스의 최대주주가 될 공익법인이다.

진흥회는 뉴스 통신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뉴스통신진흥자금의 운용 관리, 연합뉴스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대표이사외 이사 및 감사의 추천 등의 업무를 맡아 연합뉴스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뉴스통신진흥법에 따르면 진흥회 이사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추천한 3인, 방송협회와 신문협회가 추천한 2인을 포함, 모두 7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즉 진흥회는 청와대가 추천한 2명을 포함, 국회의장이 추천한 1명,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추천한 2명, 방송협회와 신문협회가 각각 추천한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이사장은 상임이며 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진흥회는 작년 10월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이창우 전 부산일보 논설고문을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등 인적구성을 마쳤으며 유상증자 일정에 따라 이달 말 연합뉴스의 1대주주가 된다.